

## 금속노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물길 낸다

### 노조, 모든 지역·기업지부 11.21 총파업 결의...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마지막 기회다”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를 선두로 11.21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으로 사회 대개혁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11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11.21 사회적 총파업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모든 지역지부가 11월 21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부분 지역·기업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11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금속노조 앞에 놓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이제 물길을 바꾸려 한다. 금속노조 모든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사회 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라며 총파업 승리를 자신했다.

허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결의 발언에서 “민주노총이 결의하고 금속노조가 결정한 11.21 총파업에 현대자동차지부 5만 2천 조합원 모두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허부영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수익성 없는 공장을 새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상호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강행으로 해묵은 지역 감정이 살아나고 있다. 저임금 나쁜 일자리가 늘고, 좋은 일자리 고용을 위협할 뿐이다”라고 비판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임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과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11.21 총파업으로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금속노조가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민주노총·산별노조연맹, 11.21 총파업 조직 시국 농성 돌입

### 탄력근로 기간 확대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요구...청와대, 민주노총 지도부 강제로 끌어내

민주노총은 11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11.21 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총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오를 흐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들의 총파업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위력

적인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시국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권 보장 ▲제대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끌어냈다. 민주노총은 ‘치졸한 탄압’이라

며 “청와대가 농성장을 찾아와 대화할 노력은 하지 않고 지도부를 끌어냈다.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 담쌓는 국정 운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국 농성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 16개 산별 연맹 대표자들이 참가해 11월 20일까지 전개한다.

# “광주형 일자리는 포퓰리즘 기만 대국민 사기극”

자동차 산업 살리기 울산노동자대회 열어... “광주형 일자리·탄력 근로제 개악 저지 11.21 총파업 결행”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1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 살리기·울산경제 살리기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반대와 11월 21일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며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하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경차 판매시장은 연간 14만대이다. 지속 하락 추세에 있다”라며 “기존 자동차공장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마당에 10만대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신설하면 울산, 평택, 창원, 아산, 서산, 화성, 광명 등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차킨게임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재 2·3차 부품사들은 재벌 대기업 원청사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전속거래에 더는 버틸 수 없어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부품사가 망하는데 원청사가 견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와 자동차산업을 걱정한다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중단하고, 쓰러져가는 부품사부터 지원해 자동차산업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 다다”라고 강조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재 남아도는 자동



차공장 시설이 70~100만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 10만대 규모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라며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 포퓰리즘이다. 문재인 정권은 좋은 일자리를 영원하는 광주시민을 속이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와 탄력 근로제 기간연장 일방강행을 기도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11월 21일 금속노조 기업지부, 지역지부와 함께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복무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투쟁사에서 “촛불 항쟁 2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시대, 최저임금 1만 원 등 대표 노동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감히 시도하지 못한 탄력 근로제 기간연장과 광주형 일자리 추진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한섭 본부장은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힘으로 재벌개혁과 노동기본권을 쟁

취하겠다”라며 “울산노동자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후퇴하는 노동정책을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단협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79일째 전면 파업 중인 고강알루미늄 지회 조합원들을 소개한 뒤, “광주형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

부가 경제가 파탄 나니 들과구로 삼은 정책이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열 지부장은 “금속사업장만 보더라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로 노조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11월 21일 탄력 근로제 기간연장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결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회를 마치고 윤한섭 본부장과 하부영 지부장, 강수열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반대 항의서한’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까지 행진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지역감정 유발 시도’이자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경영 승계, 한전 부지 GBC 인허가를 위한 정경유착의 의구심’마저 든다며 ‘총파업 투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얘기 좀 합시다”

‘비정규직 그만 쓰게 공동행동’ 개시 ... 경찰, 대표단 면담 요구 공개고, 강제해산 나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 5일간의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대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년만 기다려달라던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에 나섰다”라며 “대통령과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한 100인의 대표단과 대화를 하자. 약속대로 비정규직 없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가 불법파견, 특수고용, 아르바이트 노동 등 각종 불안정 비정규 노동의 현실을 전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정규직 옆자리에서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임금은 절반이고 힘든 일은 더 많이 한다”라며 “법원은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 지엠은 해고하고 공장 밖으로 내보냈다.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환 사무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정규직 이행을 강제하라며, 창원지청 접거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용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자회사화하겠다는 대답과 사측의 회유 협박뿐이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자회사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12월 30일이면 우리는 해고당한다. 이 부당한 현실을 대통령과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행진단이 청와대 앞에 다가서자 경찰이 가로막았다. 공동투쟁단은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들의 접근조차 차단하는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상처를 입어 병원에 실려 갔다.

## “한국지엠 불법파견, 고용노동부가 답을 내라”

한국지엠비정규직대책위, 노동부 창원지청 무기한 농성 ... 64명 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요구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비정규직대책위가 11월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경남지부는 농성 대오를 엄호하기 위해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지회별로 조를 짜서 천막농성장을 시수하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무

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64명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 구속기소를 요구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업체 폐업을 이유로 지난 2월 1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은 이들이 불법파견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지엠은 법 절차에 따라 해고자들

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거부하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과 9일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지만 노동부는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원청과 하청 모두 회사 상황을 거론하며 해고자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농성단은 노동부는 사측 입장에서 말고 불법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